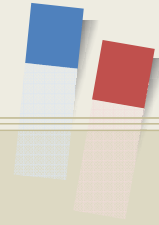


연금전문가포럼 12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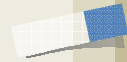
기초연금 도입과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전망

김 원 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목 적

- ◆ 기초연금 도입의 논의 과정과 평가
 -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 해결 관점
 - 논의과정에서 거의 모든 기초연금모델 제시: 평가
 - 한국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전환
- ◆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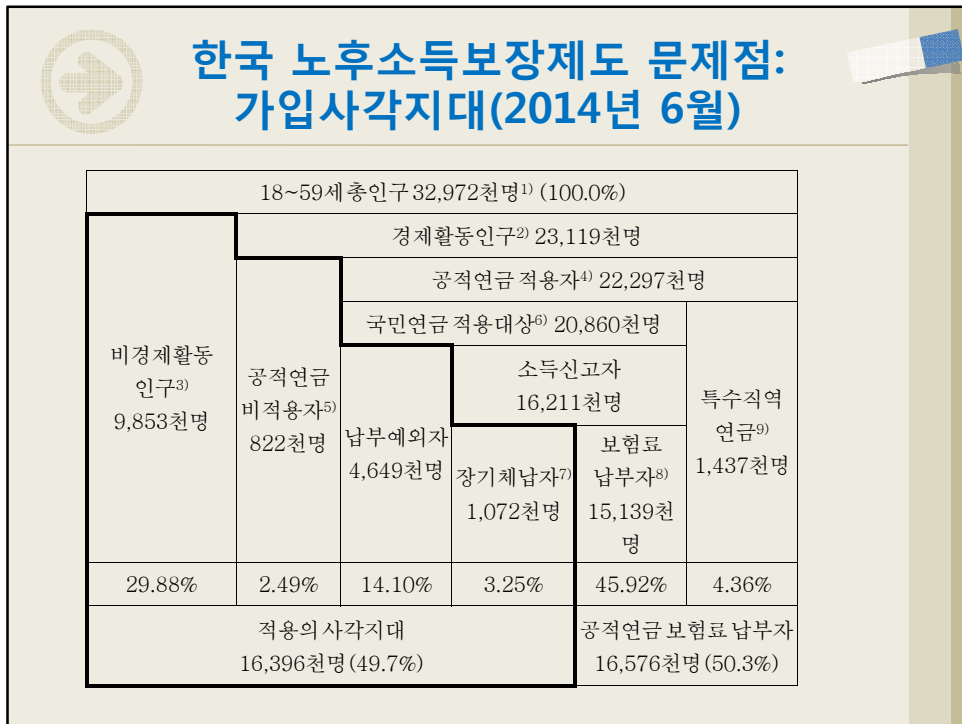
내 용

- I. 서론
- II.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쟁점
- III.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과정
- IV.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도입안의 평가
- V. 한국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전망
- VI. 결론



II.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쟁점

3층	개인연금 등		
2층	퇴직수당	퇴직(연금) (8.3%, 20% 내외)	
	특수지역 연금 (14%, 62.7%) 적용: 143만명	적용: 520만명	
1층	국민연금 (9%, 40%) 적용: 2,297만명		
	기초노령연금 (조세, 10%)		
0층	기초생활보장		
	2014.06		
	공무원등	경찰인구	비경찰인구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 문제점: 가입사각지대

구분	가입대상	가입자 규모(A)	민간부문 경향인구(B)	20-64세 인구(C)	실가입율 I A/B	실가입율 II A/C
미국 (OASDI)	연령무관 소득활동인구	162,310 (’08)	153,124 (’07,16세)	184,016 (’09)	106.0	88.2
독일 (공적연금)	16-65세 피용자등	34,988 (’07)	41,416 (’07,15세)	49,899 (’09)	84.5	70.1
영국 (기초연금)	16-65세(여: 60) 소득활동인구 등	33,400 (’07~8)	30,790 (’07,16세)	37,153 (’09)	108.5	90.0
캐나다 (CPP+QPP)	18-70세 소득활동인구	16,256 (’07)	17,696 (’07,16세)	20,771 (’09)	91.9	78.3
일본	기초	70,380 (’08.3)	66,080 (’07,15세)	75,328 (’09)	106.5	93.1
	후생	33,790 (’08.3)			51.1	44.7
한국 (국민연금)	18~60세 소득활동인구	15,576 (’14.06)	23,119천명 (’12.06, 18세~59세)	32,972천명 (14.06)	71.6	49



낮은 실질 가입율의 원인

- 국민연금 총가입자는 2014. 06월 2,0860천명, 이중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은 15,139천명, 4649천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 상태, 1072천명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 상태
- 납부예외자 중 대부분이 실직·휴직·사업중단·기초생활 곤란 등 경제적인 이유
- 납부예외자는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음.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줄어들지 않는 추세에 있음.
- 단순히 제도 시행 초기의 일시적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연금제도가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즉 국민연금제도가 국민들의 부담능력과 수용성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낮은 수급률 (2013.12)

65세 이상 인구(A)		6,250,986(10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B)		4,045,311(64.7%)
공적연금(C)	공적연금 계	2,305,340(37.6%)
	국민연금	2,067,085(33.7%)
	공무원연금	206,163(3.4%)
	사학연금	32,092(0.5%)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동시수급자(D)		1,130,409(18.1%)
공적연금 수급률(B+ C-D)/A*100		5,220,242(83.5%)



국민연금 수급자 및 수급율 전망

구분	수급자 수			65세 인구 대비 수급자 수 비율		
	노령 연금	장애 연금	계	노령 연금	장애 연금	계
2013	1,782	13	2,015	29	0.2	32.8
2020	2,764	28	3,311	31	0.3	41
2030	5,194	55	6,367	40.9	0.4	50.2
2040	8,972	65	10,746	54.4	0.4	65.1
2050	12,310	57	14,498	68.4	0.3	80.6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낮은 급여수준

구분	한국	일본(' 06)		미국(' 07)	독일(' 08)	영국(' 10)	캐나다(' 08)
		기초	후생	(비례)	(비례)	(기초)	(기초+비례)
이론적 대체율 (A)	40	20	42	40	43.5	15	40
실수급자 대체율* (B)	16	16.5	37.5	33.1	28.8	13	28.2
B/A	50	82.5	89.3	82.8	66.2	86.7	70.5

주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 대비 기존수급자의 월평균연금액의 비율임.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노후소득의 양극화

- ❑ 일부의 고소득층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중층적인 보장을 누림.
- ❑ 하지만 중하층과 저소득층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두 제도 중 한 제도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
- ❑ 따라서 이들은 위의 두 제도 중 어느 제도에 포함되더라도, 매우 낮은 급여수준을 피할 수 없고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움.

소득분위별 보험의 조합

유형	국민연금		퇴직연금(퇴직급여)		개인연금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1유형	○		○		○	
2유형	○		○			○
3유형	○			○	○	
4유형	○			○		○
5유형		○	○		○	
6유형		○	○			○
7유형		○		○	○	
8유형		○		○		○

소득분위별 보험의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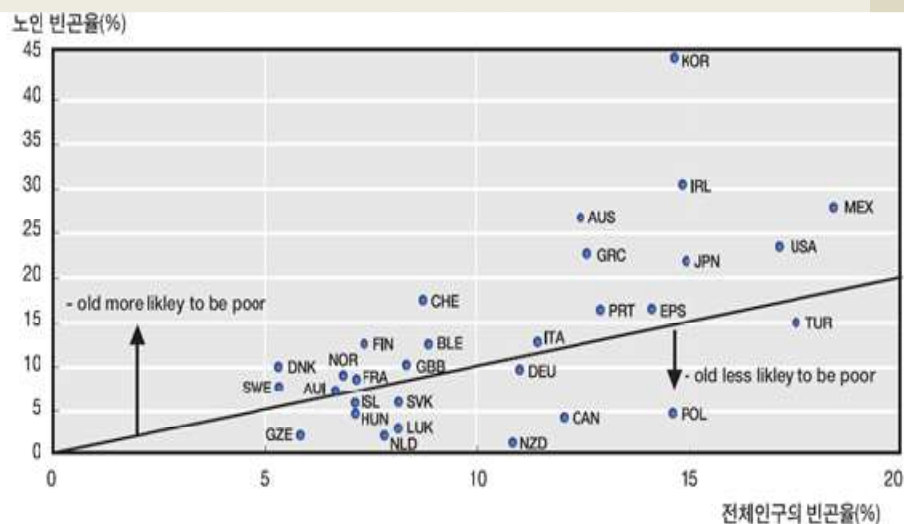
소득계층	가입유형	2차 (2008)	3차	4차	5차	6차 (2012)	전체
1분위	1유형	.1		.2	.1	.2	.1
	2유형	12.0	12.7	9.9	10.4	11.3	11.3
	3유형				.2		.0
	4유형	18.2	18.5	11.1	24.0	15.1	17.3
	6유형	7.6	6.3	6.6	4.1	3.7	5.7
2분위	8유형	62.2	62.5	72.3	61.2	69.7	65.5
	1유형	.1	.7	.7	.8	.5	.6
	2유형	35.2	32.6	32.7	34.8	32.1	33.6
	3유형	.2		.1	.1		.1
	4유형	17.4	14.8	14.2	16.5	15.3	15.7
3분위	6유형	11.0	12.4	14.1	8.8	10.7	11.3
	8유형	36.0	39.4	38.1	38.9	41.4	38.7
	1유형	1.5	2.1	4.6	3.0	2.4	2.7
	2유형	49.6	43.8	45.0	48.9	46.2	46.6
	3유형				.3	.1	.1
4분위	4유형	17.9	15.3	13.7	19.5	17.9	16.8
	5유형		.2			.1	.1
	6유형	4.6	9.5	10.8	5.5	7.1	7.5
	7유형		.1				.0
	8유형	26.4	29.1	25.9	22.8	26.2	26.1

소득분위별 보험의 조합

소득계층	가입유형	2차 (2008)	3차	4차	5차	6차 (2012)	전체
4분위	1유형	5.1	6.5	6.4	8.4	7.5	6.8
	2유형	61.7	58.0	57.0	58.6	58.8	58.8
	3유형		.2		.1		.1
	4유형	17.5	16.2	15.7	19.0	16.0	16.9
	5유형	.2	.1	.1			.1
	6유형	2.0	4.7	4.5	2.3	3.5	3.4
	8유형	13.5	14.3	16.4	11.7	14.2	14.0
5분위	1유형	23.4	25.3	24.5	26.2	26.8	25.3
	2유형	52.3	48.3	44.3	46.4	46.0	47.4
	3유형	.3		.4	.3	.3	.2
	4유형	16.7	16.5	16.7	20.5	18.2	17.7
	5유형	.1	.6	1.0		.4	.4
	6유형	1.2	1.9	2.8	1.0	1.1	1.6
	8유형	6.0	7.4	10.3	5.7	7.3	7.4
전체	1유형	5.5	6.6	7.0	7.3	7.1	6.7
	2유형	41.6	39.1	37.8	40.3	38.8	39.5
	3유형	.1	.1	.1	.2	.1	.1
	4유형	17.5	16.3	14.3	19.7	16.4	16.8
	5유형	.1	.2	.2		.1	.1
	6유형	5.6	7.0	7.9	4.5	5.4	6.1
	7유형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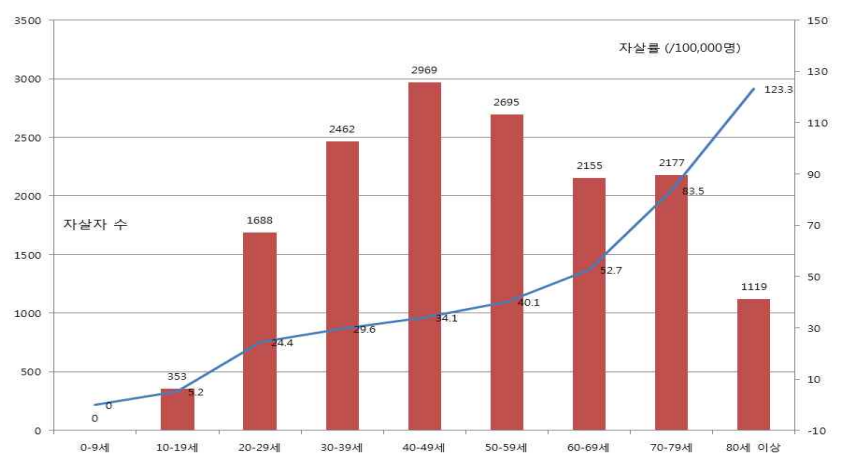


노인문제: 노인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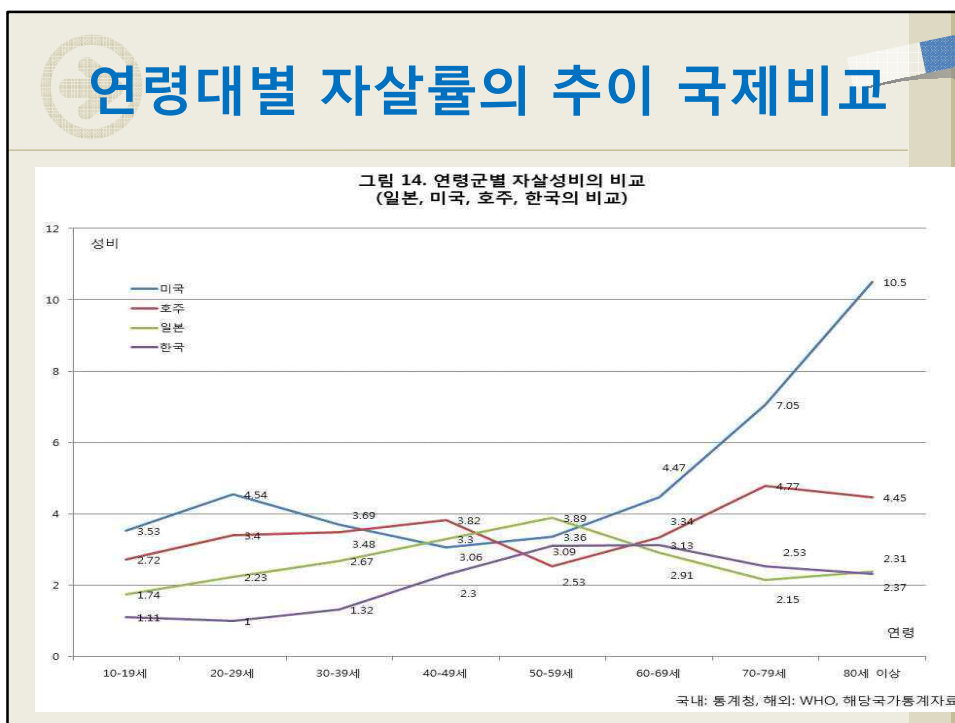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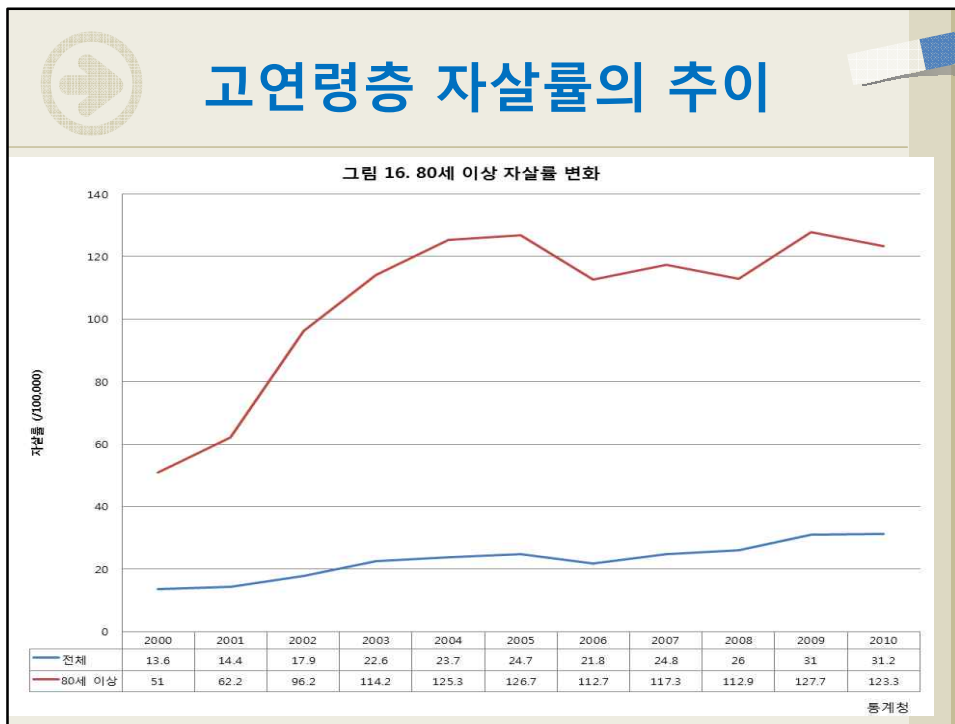


연령대별 자살률의 추이

그림 8. 2010년 연령별 자살률, 자살자 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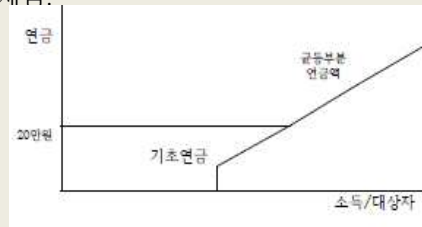


한국 노인문제와 노후소득보장의 문제점

- 노인문제는 높은 빈곤, 열악한 근로 지위, 높은 자살률 등 심각. 60세 이상 자살 총동의 35%가 경제적 어려움. 질환 36%와 함께 중요
- 이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후소득보장체계,
 - ❑ 국민연금제도는 구조적으로 모든 국민을 포괄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로 발전하기 어려움. **적용 사각지대의 문제**
 -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 낮고**, 중복수급이 제한.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공적연금을 수급만으로는 노후에 절대빈곤도 면할 수 없음.
 - ❑ **연금제도의 혜택이 이원화**의 경향.
 - ❑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시적 수정이 아니라 **보편성, 중층보장, 연금제도 내의 형평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구조적 개선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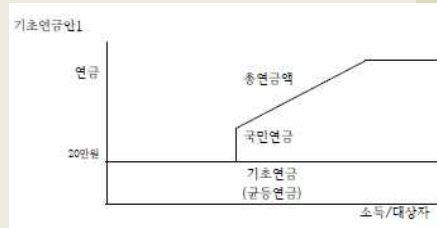
2.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쟁점: 기초연금도입 기본형 1: 사회부조안

- **선별적 부조제도로**의 개편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동시수급을 최소화
- 대표적인 안이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계획대로 10%로 올리되, 포괄범위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함(한나라당 당정협의회안).
 - 이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포괄범위는 2015년에 65세 인구의 **67.7%**, 2040년에 **40.7%**, 2060년에는 **36.3%**로 감소.
- 대부분의 노인들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중 하나만을 수급할 수 있고 동시 수급은 최소한으로 억제됨.



기본형 2: 보편적 기초연금안

-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을 완전히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 **보편성(universalism)**: 경제활동 여부와 소득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
- 목적: 단순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연금보장**. 특정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제공.
- **균등급여(flat rate)**: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연금급여**. 단, 기본액 기준, 가입기간, 거주기간, 소득 및 자산수준에 따라 급여액 차등화
- 대표적인 안: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로 인상하고 포괄범위도 현재의 약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임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중층보장.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축



1) 노후소득보장

- ❑ 현세대 노인들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노인빈곤 완화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동일
- ❑ 미래 노인세대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
 - 1 기본안: 기초노령연금 수급범위를 장기적으로 40%로 축소하는 근거는 국민연금과 사적소득으로 나머지 60%가 노년 빈곤을 탈출.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 수준은 가입자 평균소득의 약 16%, 향후에도 급여수준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 국민연금 수급자의 큰 부분이 노인빈곤
 - 2 기본안이 장기적으로 볼 때 중층보장. 노인빈곤 완화에 더 큰 효과

2) 국민연금 가입유인

- **기본형 1 사회부조식. 제도 충돌:** 기초노령연금을 사회부조를 할 때 급여수준을 10%로 하거나 이보다 조금 높게 하게 됨. 그런데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수준이 향후에도 18% 내외 불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저소득그룹은 국민연금을 납입할 유인이 없음.
- **기본형 2 보편적 기초연금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어서 가입유인 약화가 심하지 않음.

3. 재정부담: 감당할 수 있는가?

연도	기본형 1			기본형 2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GDP 대비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GDP 대비
2015	8,058	17,849	1.7%	15,193	17,849	2.2%
2020	14,911	33,487	2.2%	26,229	33,487	2.8%
2025	26,658	55,735	2.9%	46,325	55,735	3.6%
2030	40,953	89,176	3.6%	76,266	89,176	4.6%
2035	53,325	137,826	4.3%	114,489	137,826	5.7%
2040	66,186	212,563	5.3%	159,373	212,563	7.1%
2045	83,520	305,324	6.3%	206,878	305,324	8.3%
2050	102,478	412,288	7.1%	260,320	412,288	9.3%

III.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도입과정

1. 대통령 공약과 인수위 기초연금안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고, 모든 노인에게 A값의 10%(20만원)을 지급하겠다"

□ 인수위의 행복연금 도입안

구분	하위 70%		상위 30%	
	비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현행	10	10	0	0
개편	20	14~20*	4~10*	4
해당인원	303만명	88만명	71만명	137만명

□ 보편적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재정은 44조(100% 주면 6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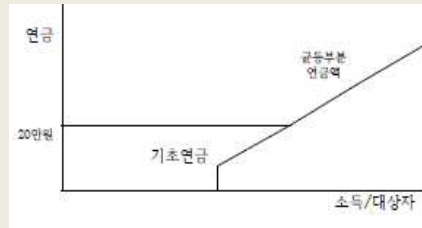
2. 국민행복연금의 대안들

- 선별부조안 : ③안과 ⑥안
 - 국민연금의 성숙과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급대상의 범위가 크게 위축됨(노인의 40%)
- 기초연금안 : ①안과 ②안
 - 국민연금의 성숙과 발전에 관계없이 지급범위가 일정하게 고정
- 절충안 : ④안과 ⑤안
 - 지급범위는 고정되나 지급액이 소득에 따라 크게 감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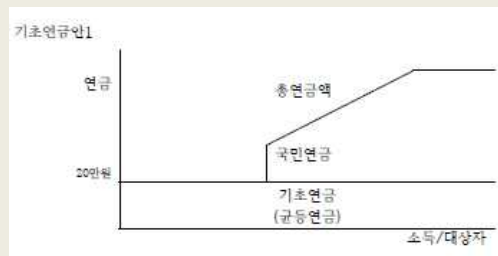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선별적 부조안. 3안과 6안

- 3안: 최대 A값 10%를 지급하되, “국민연금 균등(A) 부분 + 기초연금 = A값 10%” 가 되도록 지급
 - 국민연금 미수급자는 20만원 전액 수급하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균등부분 연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그 차액을 수령.
 - 균등연금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즉, 국민연금이 성숙할수록 커지므로 자연히 장기가입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거나 적은 금액만 수령 가능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간에는 중복수령이 크게 제한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안. 1안과 2안

- 1안: 일정 노인(70~100%)에 A값 10%를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완전 중복적으로 수급가능
- 2안. 인수위 안: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으나, 가입기간이 40년 이하인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의 급여가 부분적으로 삭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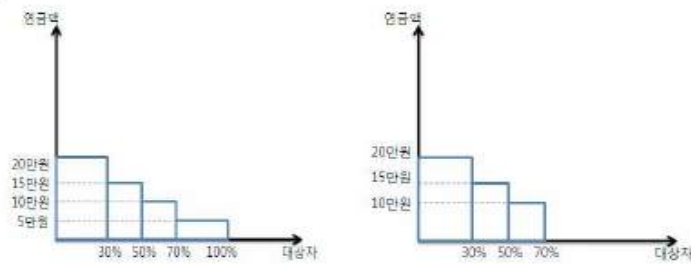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절충안. 4안과 5안

- 4안: 노인 100% 대상으로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아래 그림 중 좌측) 소득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지급액 차등
- 5안: 노인 70% 대상으로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그림 9] 절충안



국민행복연금 위원회의 대안

구분		보편성 및 급여적정성	가입자 역차별	재정부담
기초연금화안	① 20만원 전액지급	우수	없음	매우 큼
	② 인수위안		중간	중간
선별부조화안	③ 20만원과 균등연금액 간 차액 지급	미흡	심각	가장 적음
	⑥ 수급자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150%			
절충형	④ 100%지급, 소득구간 차등	중간	다소 심각	중간
	⑤ 70%지급, 소득구간 차등			



국민행복연금 위원회: 기초연금도입 7대 원칙

- 1)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 조달(국민연금기금 미사용)
- 2)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함.
- 3) 기초연금 지급범위는 노인의 70~80%로 함.
- 4)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함.
- 5) 차등 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함.
- 6)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7)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함.



국민행복연금 위원회 주요 권고안

	대상자	급여액	재정소요(조원)	
			14~17	2040
1안(3안) (국민연금연계안)	70%	국민연금A급여에 따라 차등	36.1	68.4
2안(6안) (소득인정액 연계안)	70%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34.2	88.6
3안(균등지급안)	80%	20만원 정액 균등 지급	48.7	129.1



VI.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평가

1. 새로운 기초연금제도

□ 1안(A값 연계방식)의 보완형

인수위안	구분	최종정부안
노인의 100%	지급대상	노인의 70%
4~20만원 70% 지급대상으로 기준으로 볼 때 14~20만원	지급수준	10~20만원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등기준	국민연금 A값(가입기간 역비례)

구분	20만원	15~20만원	10~15만원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353만명 (61만명)	20만명 (17만명)	18만명 (10만명)*



기초연금제도 내용: 급여의 특징

- 급여산식: $20 - 2/3a + 10$
- 상한선과 하한선: 하한선은 10만원보다 낮아지지 않게 해서 70% **포괄범위**를 유지시킴
- **국민연금과 연계**: 균등부분이 20만원이 안되는 부분을 채워줌: 균등부분의 급여액은 보험료 납부기간에 의해서만 변동함. 2028년 이후 산식에 의하면 가입자는 1년에 보험료 납부에 한달에 1만이 (현재가치) 증가
- **2/3 조정계수**로 급여하락을 완만하게 함. A값이 2028년 산식상으로 15년과 30년이 1년 추가 가입에 만원이 아니라 6700원 감액.
- +10과 조정계수와 함께 감액을 15년 가입 이후로 미루는 기능. 없다면 10년 최소보험료 납입자부터 감액이 시작됨.



기초연금제도: 재정

	2014-2017	2020	2040
기초연금제도 (70%)	39.6	17.2(0.8; 2.5)	99.8(1.9; 6.0)
인수위안(100%)	44.3	19.1(0.9; 2.5)	116.6(2.2; 6.3)
20만원 전액(70%)	42.9	18.5(0.9; 2.5)	271.2(2.1; 6.2)
소득차등지급 (70%)	34.2	14.5(0.7; 2.3)	212.7(1.7; 5.8)
최저생계비 150%	41.1	16.4(0.7; 2.3)	65.7(1.3; 5.4)

참고하기 위해 만든 저자의 추정액이므로 인용하지 마십시오



2. 정부안의 평가 1: 사각지대

- 사각지대문제의 완화로 빈곤완화효과가 기대됨.
- 노인빈곤 지속
 - 공적연금의 미성숙 등으로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악화 중
 - 100%에 15%의 기초연금을 지급해도 빈곤율은 35%를 상회함, 40%에 10%를 지급할 경우는 40% (김원섭, 2012)
 - 이는 특히 낮은 공적연금 수준(국민 30만원, 기초 20만원), 낮은 노인고용율과 질 낮은 노인일자리, 자녀의 부양의식 약화로 인한 사적이전소득 감소에 기인
- 특히, 물가상승에만 연동해서 인상 경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의 급여수준 인하:



2. 기초연금제도의 평가²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가 65세 이상 노인의 70%나 그 이상으로 확정. 실재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이래 수급자의 범위를 70% 이하로 축소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사회부조방식의 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입장이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 하지만 기초연금도입으로 사회부조안은 영향력을 상당히 잃을 전망.



2. 기초연금제도의 평가²: 부분적 중층보장, 저급여문제

기초연금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의 분포추정(2013)

구분	계	하위 70%		상위 30%	
		비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비수급자
인원(만명)	598	303	88	71	137
구성(%)	100	50.6	14.5	12	22

기초연금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의 분포(2014.10)

구분	계	기초연금수급자 하위 66.5%		기초연금 비수급자	
		비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비수급자
인원(만명)	648	301	130	89	128
구성(%)	100	46.5	20	13.7	19.8



2. 기초연금제도의 평가₂: 부분적 충족보장, 저급여문제 2014.10

노인인구의 소득구간별 분포(2060년)

구분	계	하위 70%		상위 30%	
		비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인원(만명)	1762	292	942	444	85
구성(%)	100	16.6	53.5	25.2	4.8



2. 기초연금제도의 평가₃: 형평성

- ❑ 공무원과 일반 국민 간, 일반 국민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적용제도의 차이 및 높은 사각지대로 인해 노후 보장 격차 심화 및 고착화 우려
- ❑ 특히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는 주로 비정규직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이고 이들이 전체 경활인구의 1/2 차지
- ❑ 현재의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근로기의 소득불평등은 노후에도 지속 내지 악화 불가피 전망



2. 기초연금제도의 평가4: 제도 통합성

- 2014년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기초연금화는 특히 국민연금과 기능조정을 하면서 이루어졌어야 함.
-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함에 따라 총 급여수준의 인상(40%→50%)과 함께 재분배기능의 중박(종전: 국민 20% or 기초 10% → 현재: 국민 20% & 기초 10%) 문제 초래
- 야당과 협의 중 삽입된 국민연금 30만원 이하 수급자에 대한 완전 기초연금 지급 규정,
- 과다한 재분배와 저수급자에 대한 급여보장은 저소득층 가입의욕 저해 가능성을 높이고 공적연금 전체의 재정지속성 약화시킬 수 있음
- 공사연금간 역할분담 구조의 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도 크게 희석시킬 우려도 있음. 전반적으로 공적연금간, 공사연금간 역할분담이 더욱 불안정해졌다고 할 수 있음.



V. 한국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전망

- 패러다임의 전환: 국민연금 단일 공적연금제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층적 체제로 전환. layering
- 전환은 진행 중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통합성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 결합방식

1. 기초소득보장과 비례연금의 결합방식

- 기초보장과 퇴직연금: 단층형 기초연금제도, 소득지위 보장은 의무가입 형태의 퇴직연금: 호주.

=>성취인센티브가 연대성을 보조함. 높은 비용과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

-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사회보험은 소득지위보장의 소득비례연금, 단층형 사회부조는 저연금자나 무연금자에게 최후의 안전망: 독일, 미국.

=>연대성이 성취인센티브를 보조함. 중간 비용 중간 빈곤 (이용하. 2014).

1. 기초소득보장과 비례연금의 결합방식

-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의 이원체계: 비례연금은 기초연금을 보완, 보편적 기초연금과 선별부조제도의 복층형 기초보장: 캐나다, 일본:

=> 기초연금의 연대성과 비례연금의 성취인센티브가 분담. 저비용 중간 빈곤

- 비례연금과 복층형 최저연금: 고부담, 고급여의 비례연금이 주도, 복층의 최저연금은 비례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를 구분함, 최저연금은 보충급여, 복지연금은 정액수당.

=> 최저보장은 비례연금의 성취인센티브를 저해하여 연금가입유인저하, 최저연금의 분리는 연대성 저하. 고비용- 고빈곤. 비효율적 형태. 원인은 비통합적 결합방식

(이용하. 2014).

구분		GDP 대비 지출비중(%)		노인빈곤율(%)	
		2009	2050	(2007/2010)	
고부담· 고급여형	그리스	13.0	15.4	15.2/15.8	
	스페인	9.3	14.0	20.6/12.5	
	이태리	15.4	15.7	14.5/11.0	
	터키	6.8	11.4	13.7/17.6	
중부담· 중급여형	독일	11.3	13.0	10.1/10.5	
	미국	6.8	4.8	22.2/19.9	
	스웨덴	8.2	9.9	9.9/9.5	
	노르웨이	5.4	13.9	8.0/5.5	
저부담· 저급여형	기초 + 퇴직	네덜란드	5.1(10.7)	10.4	1.6/1.4
		호주	3.5(5.5)	4.9	39.2/35.5
		뉴질랜드	4.7(6.0)	8.0	23.5/12.5
		아이슬란드	1.7(5.5)	-	9.4/3.0
	기초 + 비례	영국	6.2	8.2	12.2/8.6
		캐나다	4.5	6.3	5.0/7.2
		일본	10.2	-	21.7/19.4

(이용하 2014)

(이용하 2014)



2. 한국 노후소득보장의 전망

- 재정적, 사각지대: 현재 저비용(2040년에도 GDP 8%, 저급여(고빈곤))
 - => 빈곤완화를 위해 재정을 확대 여지가 있음
- 제도의 통합성. 성취인센티브와 연대성의 역할 분담이 명확치 않음.
 - 국민연금에서는 성취성이 연대성과 같은 비중
 - 국민연금 저급여자에 대한 최저연금제도가 기초연금에 설정 30만원
 -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결: 성취인센티브 강화 균등부분을 10%로 줄임. 크레딧, 보험료지원
 - => 기초연금에서 최저연금제도 폐지(50만원?)
- 한국의 특수성: 지역 별 격차. 특권적 특수지역연금과 기초연금 외의 제도에서 배제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 => 특수지역연금 개혁, 기초연금 급여를 15%로 인상, 자영업자들을 위한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



VI . 결론

- 연금문제는 노인빈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전에는 끝나지 않음. 연금제도는 향후에도 양적으로 확대될 전망
-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은 2007년 시작한 공적 연금제도의 중층화로의 전환을 이끔
- 고비용-고빈곤과 저비용-저빈곤 두 가지 선택이 있음
- 제도간 통합성과 지역별 형평성을 강화해야 낮은 비용으로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기초연금의 조정·확대와 국민연금제도의 조정이 필요함